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행복 금융 실현하는~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인 19일 오전 동구 광주공원내 4.19혁명기념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시장 "5·18헌법수록으로 4·19 정신 완성시켜야"

광주공고서 4·19혁명 65주년 기념식… 시위 참여학교 순회 개최
광주공원 4·19혁명기념탑 참배 희생자 기려… 민주주의 주역 감사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일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된 4·19혁명 정신을 언급하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 시장은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나침반이다"며 "우리는 4·19혁명 정신을 키우고 완성시켜야 한다. 그 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광주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계엄을 막고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길목에서 맞이한 4·19혁명 65주년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지기를 열망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4·19혁명 시위 참가자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역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강 시장은 "65년 전 광주공업고 학생들은 금남로에 집결해 4·19혁명의 한복판에 서있었고, 그 소년소녀들은 80년 5월의 수많은 동호가 됐고, 오늘날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응원봉을 들고 빛을 밝힌 키세스 단이 됐다"며 "이처럼 많은 소년소녀들이 오늘의 4·19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 참여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내년에도 미래세대가 있는 혁명의 교정에서 4·19정신을 기릴 것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광주공원 4·19혁명기념탑에서 헌화·분향했다. 참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양부남·조인철·박균택 국회의원, 4·19공법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4·19혁명 당시 경찰 발포가 있었던 3곳(서울·부산·광주) 중 하나로, 매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강기정 시장의 제안으로 4·19정신이 박제화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며 기념식 장소에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 슬로건 '거리에 불붙은 그들의 혼을 보라'는 4·19혁명을 이끌었던 이들의 의지를 기리는 윤후명 시인의 시 '역사를 증언하는 자들이여 4·19의 힘을 보라'에서 인용했다.

기념식의 시작은 65년 전 담장을 뛰어넘어 뛰쳐나가는 광주공고 학생들의 함성 재연과 윤후명 시인의 시낭송으로 채워졌다. 이어 어둠을 뚫고 불붙은 혼이 돼 혁명을 이끌었던 그들과 같이 불타는 혼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광주 스트릿댄스팀 '리바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나 선언문을 대표 1인이 하는 기존의 형식과 달리, 1960년 4·19혁명의 주역인 4·19민주혁명회 고종채 지부장과 광주공업고등학교 유민상, 김아영, 박유연, 김정혁 학생이 함께 무대에 올라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4·19 정신 계승 결의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에서 4·19혁명 정신선양 유공자로 선정된 고상숙, 김성대, 김태균, 김태영, 민은식, 이은재, 정은숙, 최창호씨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박도일 기자

'전남 국립의대' 내년 신설 무산 2027년엔 가능?… '플랜B' 시급

"의대 없는 유일한 곳"… 대선후보 '입' 통해 신설 공약화해야
주요 의료 지표 전국 최하위권, 의대 설립 명분 차고도 넘쳐
경북도 비슷한 처지… 영·호남 연대 등 투트랙 전략도 살펴야

의정 갈등에 이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백지화로 전남 국립 의과대학 내년 신설이 무산되면서 2027년 개교를 위한 '플랜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고도 넘치는 신설 명분에 의료 취약지 지자체 간 연대 등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만에 원점 회귀다. 전남도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 의대 신설도 1보 후퇴하며 잠정 무산됐다.

전남도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재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21대 대선과 9회 지방선거 경선시기가 맞물려 있어 2보 전진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대선 공약화다. 도는 최근 각 정당과 캠프에 보낸 전남의 20대 현안 첫머리에 '국립 의대 설립'을 제시했으나 실효성과 속도감을 담보하기 위해선 대선 후보들이 직접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유력 후보들의 '입'을 통해 공약으로 못박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26일 민주당 호남권 경선과 합동연설회는 중차대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논리개발도 중요하다. 우선 '의대 정원과 취약지 의대 신설은 별개'라는 대전제 아래 불모지 전남에 첫 의대 신설은 명분이 차고도 넘치는 점을 집중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도권에 의대가 집중된 가운데 전북과 충북에도 각각 2개, 강원에는 4개의 의대가 있으나 전남에는 국·공·사립 통틀어 단 한 곳도 없다. 전남은 특히 노인·장애인 비율이 25.6%와 7.6%로 전국 1위고 의사 없는 유인도 역시 무려 16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지방의료원 내 상당수 진료과는 휴진 상태다. 공중보건의는 해마다 줄고 있다.

1인당 의료비는 242만원으로 경기도의 1.5배로 전국 1위다. 중증응급·외상환자 유출률도 48.9%, 49.7%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 데다 원정진료로 인한 의료비 유출도 연간 1조 5000억원(7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응급실 전담 의사수도 전국 최하위인 반면 긴급환자 이송시간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골든타임 확보가 버거운 실정이다. 중증 외상환자의 경우 대전은 43.4분인 반면 전남은 112.9분이고 급성 심근경색은 대전 89.4분, 전남 216.2분으로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여러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다투는 경북과의 연대도 고민해 볼 대목이다. 경북에선 안동 국립 의대에 지역인재 육성,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필요할 경우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영·호남 지자체, 대학 간 연대를 통한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과 경북엔 지역구 국회의원이 10명과 13명에 이르고 지역연고 비례대표까지 더하면 만만찮은 인원이어서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쪽에 정원 100명씩, 여의찮을 경우 성균관·울산대 전례대로 50명 미만으로 출발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의대는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으로 지역대학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전남 동·서부권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에도 주춧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공공의대와 달리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상의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승원 기자